

이슈 파헤치기



43억 상당 탈세 유흥주점 업주, 징유 5년 · 벌금 45억 판결

광주지법 “범행기간 길고 포탈한 세액 적지 않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세금 43억원 상당을 포탈한 업주가 집행유예와 함께 45억원 상당의 벌금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특가법상(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

금 45억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7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부

가가치세·개발소비세·종합소득세 등 총 43억 47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종합소득세 산정시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종업원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위장 사업장 4곳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사업장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는 등 소득을 분산해 신고하고,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종업원 명의로 사업장을 등록해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7년 동안 43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포탈 행위는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전가해 조세정의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A씨의 범행 기간이 장기적이고 포탈한 세액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강제집행을 통해 23억원 이상의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유흥주점들이 모두 폐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호기심에 해외서 대마초 접한 여행객, 공항서 걸린다

탐지장비 강화...마약류 의료쇼핑 빅데이터로 분류·점검



인천 공항세관본부 관계자들이 마약 탐지견과 함께 여행가방에 숨겨진 마약을 찾아내는 시범을 보이는 모습.

해 마약탐지견인 이온스캐너 19대, 중대형 수입화물검색용 엑스레이 3대를 공항에 추가로 배치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다크웹과 가상통화를 이용해 마약류를 거래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마약 전담검사 회의를 열고 수사기법을 공유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2020년 대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우선 2020년 2월 자신이 투약한 마약류 이력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같은 해 6월에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의료쇼핑이 의심되면 투약 내역을 확인하는 서비스도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AI 기술을 활용해 과량·중복 처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마약류취급지를 선별하는 감시기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2020년 1월에는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전에 전문 의료로부터 검사와 상담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기관 간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호기심에 대마초 성분이 들어간 젤리나 초콜릿을 국내로 반입하는 여행객 또는 유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공항 내 탐지 장비를 강화한다. 또 동네병원을 전전하며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마약사범을 분류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다크웹(Dark Web)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사용을 빅데이터로 감시, 마약류 중독

자 실태조사 및 재활교육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검찰과 세관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공항과 항만의 여행객 휴대품 및 특송화물에 은닉한 마약류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마약류인 대마초를 합법화 한 국가에서 여행하다가 호기심에 대마초 젤리 또는 초콜릿을 구입해 국내에 반입할 경우 단속에 걸릴 수 있다.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대마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



굴욕협상 중단 촉구하는 민주노총과 민중당 민주노총 조합원과 민중당 당원들이 17일 제5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열린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방위비 분담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 규탄과 줄속 협상 타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정무적 최종책임은 내게”

“‘직권남용 의한 감찰중단’이란 잘못된 프레임 확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54)이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한테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17일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조 전 장관은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 ‘유재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며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밝혔다. 그리고 당시 조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서울 동부지검은 16일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중단 의혹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을 하고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에 대해 중단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형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은 이전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수석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와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변호인단

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그것은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이용해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무제한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가 더해져 법원의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확정판형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는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언론을 통해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서,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8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척이요... 자폐치료장애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려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